

전방위 압수수색에 정치권 요동...국민의힘 “특검 추진” 연일 압박

좁은 여의도 ‘통일교 게이트’ 파장 어떻게 전개될까

경찰, 천정궁·통일교·서울구치소 등 첫 강제수사 착수 윤영호 ‘민주당 지원 사실 번복’에야 “대통령 겁박 타” 특검 공개기 논란 두고 개혁신당과 특검법 발의 예고

경찰의 15일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여권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여당 핵심인 사들이 줄줄이 타격을 입자, 야당은 특검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수사와 정치 공세가 맞물리며 정국 혼란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초기엔 특검의 ‘야당 정조준’

통일교 파문은 지난 7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민중기 특검)이 경기 가평군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본부를 압수수색하면서 본격화됐다. 특검은 통일교의 국민의힘 대거 입당 의혹(2023년 전당대회 앞두고 11만 명 추정), 권성동 의원 불법 정치자금 1억 원 수수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당사·의원회관·DB관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20여 차례 압수수색과 30차례 소환을 단행했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9월 구속됐으며, ‘윤핵관’으로 분류된 그의 수감은 국민의힘

에 큰 충격을 안겼다. 특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조사했으나, 여권 인사에 대한 소환은 ‘제로’였다.

이 과정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윤 전 본부장은 “2018~2020년 전재수(당시 의원)에게 현금 3천만~4천만 원과 명품시계 2점(까르띠에·불가리)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 대가로 한·일 해저터널 등 통일교 숙원사업을 청탁했다고 했다. 통일교 내부 ‘한학자 특별보고’ 문건에도 ‘전재수 의원이 부산 통일교 모임 축사, 천정궁 방문 후 협조 약속’이란 내용이 확인됐다. 그러나 특검은 공소시효 압박 등을 이유로 제대로 짚어보지 않고 경찰에 이첩, 편파수사 논란이 짙었다.

◆녹취록 폭로, 여권 타격으로 반전

수사 국면은 윤 전 본부장 재판에서 급변했다. 12월 재판에서 공개된 2022년 대선 직전 녹취록(43분)에서 통일교

간부들이 “여야 양측 접근, 신세 지게 해야”라고 말하며 여권 실세들을 거론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강선우 의원 등 민주당계 12명이 등장했다.

녹취록엔 “노영민·김연철·이종석 연출 만들었다”, “정진상 쪽 미국 명단 넘김”, “현 정부 장관급 4명 중 2명 한학자 만남”이란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이를 “수사 대상 아님”이라며 무시했다.

이와 관련, 윤영호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재판에서 민주당 지원 사실을 재확인했으나, 지난 10일 “그런 말 한 적 없다”며 번복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겁박 타”라고 규정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위반 시 종교단체 해산”을 지시하며 일본 사례 검토를 지시했다. 재판 하루 전 “헌법 위반 행위면 해산”이란 발언이 나오자, 야권은 “윤영호 입 틀어막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체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런데 윤 전 본부장 발언 번복 직후 여권 의혹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의혹 제기 직후 장관직에서 사퇴한 전재수 전 장관은 ‘2018년 현금 2천만 원시계 1천만 원 수수 의혹’으로 출구금지됐

고,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 등도 피의자로 입건됐다.

◆경찰, 15일 첫 압수수색

15일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가평군 천정궁·용산구 통일교 본부·서울구치소(한학자·윤영호 수감), 전재수 의원 자택 및 의원실, 임종성(민주당)·김규환(미래통합당) 전 의원 자택 등 10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특검이 확보하지 못한 280억 원 현금 무치 출처와 명품시계 및 계좌 추적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민중기 특검 사무실도 ‘자료 미이첩·편파 수사’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경찰은 전 전 장관,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 등 3명을 뇌물수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이들은 현재 전부 금품수수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금품수수 의혹을 촉발한 윤 전 본부장도 정치자금 또는 뇌물을 불법 공여한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확대되면 지방선거 최대 변수로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는 내년 6·3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전재수 전 장관의 사실상 부산시장

후보 낙마는 민주당 PK(부산·경남) 공세에 치명타로, 후보 재편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경찰의 수사가 확대될 경우가 주목된다. 추가 조사로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번복에도 녹취록과 ‘한학자 특별보고’ 문건이 물증으로 채택돼 정진상 등 이재명 대통령 측근 라인이 추가로 타격을 받으면 민주당으로서는 충격이 한층 클 전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의 여권 인사 연루 공개기에 대해 “권력형 범죄는, 명백한 특검 사유”라며 개혁신당과 이번 주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장동·민중기 편파·통일교 3대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내란·김건희 비리 2차 종합특검”을 강조하면서 통일교 파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여권은 ‘드루킹 재현’ 우려 속에서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김영수 전 영남대 정치학과 교수는 “통일교의 ‘전방위 로비’가 단순 금품이 아닌 정책 청탁(한·일 해저터널 등) 차원으로 확대되면 수사범위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며 “이는 지방선거에서 승패를 가를 리스크이자, 정권 초기 최대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ylr31@idaegu.com

국민의힘 지도부, 장동혁 노선 두고 공개 설전

양향자, 당 지지율·결집도 약세 주장 “보편 정서 어필 정책·메시지 등 필요”

김민수, 압박전선 ‘대여 총공세’ 강조 “당대표 흔들기? 내부공방 자제해야”

국민의힘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공개설전이 벌어지며 당내 분열 양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계엄 사과’ 요구에도 강성 당원들만 바라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노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면서다.

15일 국회 본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양향자 최고위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지도부 행보를 문제 삼았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당 대표 흔들기’로 비칠 수 있는 내부 공방을 자제하자며 전선을 ‘대여 공세’로 돌려야 한다고 맞받았다.

양 최고위원은 최근 NBS 정례조사 등을 거론하며 당 지지율과 결집도, 중도 확장성이 모두 약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을 ‘짚뿔’에 비유하며 “당의 영도가 적당해야 더 다양한 지역과 계층, 성별, 연령층의 국민 지지가 우리를 찾아온다. 그러려면 강성 지지층도 좋지만 합리적 지지층, 특정 주장이 아닌 보편 정서에 어필할 수 있는 정책, 메시지, 행보,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 최고위원은 “왜 우리 손으로 뽑은 당 대표를 흔들려고 하느냐”며 반박했다. 이어 “진짜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싶다면,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다면 어떤 기준을 들고 우리가 방

향을 정해야 할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당내에선 전당대회 때부터 예견된 최고위원들 간의 분화가 나타난 것이라 평가가 많다. 강성으로 분류되는 김민수·김재원 최고위원과 중도 지향적인 양향자·우재준 최고위원(대구 북구갑)이 대립하고 있고,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비교적 중립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당원계시관 의혹에 대한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당시에도 우 최고위원과 김민수 최고위원 간 이견이 불거졌다.

이날 당 지도부는 국회 본관 안으로 들어가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회의 후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대해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전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김민수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당이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를 전달하는 역할이 강경파에 주어질 것이다.

아울러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비상근)에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임명됐다. 장 부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부원장 임명 소식을 알리며 “당직자로서 장동혁 지도부와 당원들의 뜻을 지키는 일에도 물불 가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최근 당내에서 제기되는 계엄 사과 논란 및 지방선거 공천률 변경 등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체제가 기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시그널로 해석된다. 이상훈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 “야당 표적특검” vs 여 “2차 특검 예고” 팽팽

내란특검 수사 종결...“정치 반대세력 제거·권력 독점 목적의 내란” 규정

국민의힘 “3대 특검 가동에도 남은 건 진실 아닌 국민적 피로감”

민주당 “전반전 끝, 외환죄 의혹·내란 동기 등 제대로 수사 못해”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는 목적의 내란”으로 규정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여야가 정반대의 평가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사의 전반전이 끝났다”며 2차 종합특검 추진을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2차 특검 추진이 실제 규명보다는 내년 지방선거 등을 염두에 둔 정치적 목적이 크다며 반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 등을 토대로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이

준비됐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군을 통해 사법권을 장악하고,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한 뒤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외환죄 의혹은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고, 노상원 수첩의 진실과 내란 공모자들의 실체도 여전히 안갯속”이라며 “윤석열은 왜 내란을 일으켰는가, 내란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가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이

‘내란몰이’로 끝났으며 전형적인 야당 탄압을 위한 표적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광구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역대 최대 규모의 3대 특검이 연이어 가동됐지만, 국민에게 남은 것은 실체적 진실보다 정치적 편향 논란과 무리한 강압수사에 대한 피로감”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적 피로를 돌아보긴 커녕, 또다시 2차 종합특검을 꺼내들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도 거론하면서 “특검이 야당을 내란의 공범으로 엮기 위해 무리하게 청구한 구속영장들은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됐다”며 “증거가 아니라 결론을 먼저 정해놓은 ‘전형적인 야당 탄압 표적 특검’의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상훈 기자